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5월 13일

ISSN 1976-0507 Vol. 3 No. 15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시사점

여 지 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jina7@kiep.go.kr, Tel: 3460-1098)

- ▣ 2006년 이후 중국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은 외자 우대 세제의 폐지, 노동관련 규제 강화 및 노동비용의 증가, 반독점 및 M&A 규제 강화, 투자 선별화 정책 및 가공무역 억제책 등을 통해 외자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국내 민간저축이 증가하여 투자재원이 풍부해지고, 중국 내 투자가 과잉되는 양상까지 보임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함.
- ▣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발생 이후 지속적인 외자 유입 감소로 정책 방향을 일시적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FDI 실제사용액 증가율은 2009년 1분기 전년동기대비 20.6% 감소하였고,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연속해서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이에 따라 외자 심사권한의 하부기관 이전 추진, 외국인투자기업의 원가감소를 위한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전 장려, 최저임금 인상의 동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가공무역 보증금 적립의 잠정 정지 등 FDI 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발표됨.
-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임금수준 인상을 지향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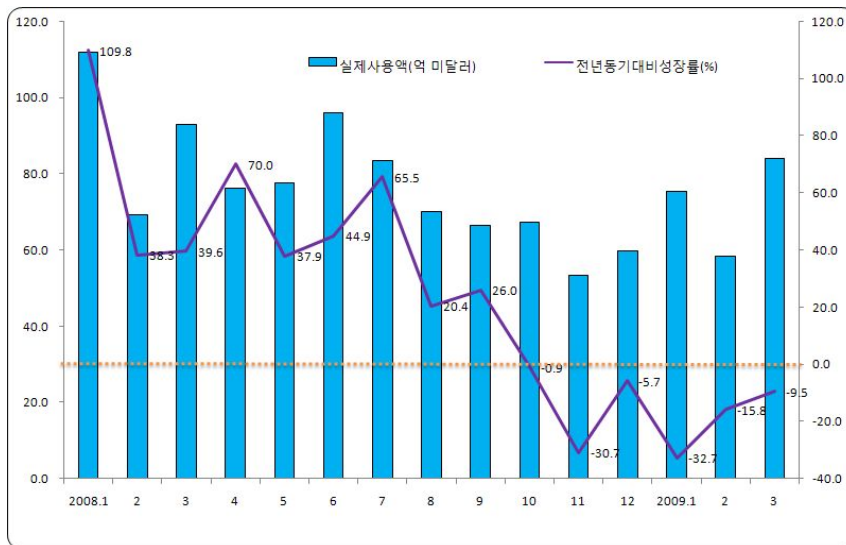
 - 따라서 중국 진출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중국 사업환경 변화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 일본, 홍콩 등 각국의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국의 외국인투자 최근 동향

- 2009년 1분기에 중국의 FDI 실제사용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20.6% 감소하였음.
- 중국 상무부가 4월 15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분기 FDI 유입액은 217억 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6% 감소했고, 전국의 신설 외자기업은 4,554개로 동기대비 3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외자 유치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기록하였음.
- 2008년 10월 -0.9% → 2008년 11월 -30.7% → 2008년 12월 -5.7%
→ 2009년 1월 -32.7% → 2009년 2월 -15.8% → 2009년 3월 -9.5%

그림 1. 중국의 FDI 실제사용액과 증가율



자료: 중국 상무부.

■ FDI 증가율 지속 감소의 원인

- 주요 對中 투자국의 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대외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가공무역)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투자 유인 감소, 위안화 절상 기대심리 급감 등이 있음.¹⁾

■ 2009년 중국 FDI 전망

1) 이치훈(2009. 3. 11), 「최근 대중 외국인직접투자 급감과 전망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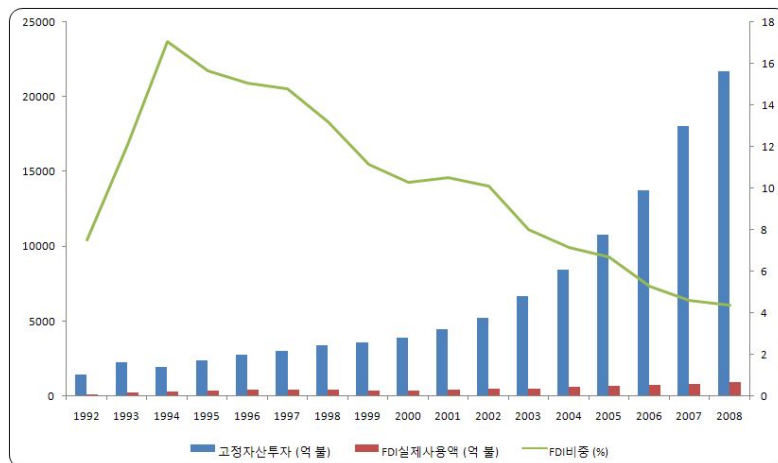
- 중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2009년 들어 매월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들어 중국의 투자 흡인력이 올 들어 다소 회복됐으며, 수출이 호전되면 외자 유치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함.²⁾
-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의 FDI 유치는 올 상반기에도 추세적인 반등을 보이기 어렵고, 올해 FDI 유입량은 지난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됨.
- UN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FDI가 21% 급감했는데 올해는 30% 더 줄어들 전망인데다가, 중국 내 외자기업 대부분이 수출기업인데 외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³⁾

2. 중국 FDI 정책의 변화 동향

가. 중국의 FDI 관련 기존 정책

- 2006년 '11. 5 경제규획' 이 발표된 후, '양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이 선별적으로 유치하는 '질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으로 전환되었음.
-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국내 민간저축이 증가하여 투자재원이 풍부해지고, 중국내 투자가 과잉되는 양상까지 보임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됨.

그림 2.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상무부 FDI 사이트(www.fdi.gov.cn).

2) 『經濟參考報』 (2009. 4. 14), 「中 3월 FDI 감소세 지속, 낙폭은 둔화」.

3) 『新華每日財經分析』 (2009. 3. 18), 「FDI 감소, 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아」.

-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은 각종 특혜 축소 및 감독, 투자 승인 규정 강화 등 기존의 우대조치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중국이 생산거점으로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함.

① 조세 비용 증가: 외자 우대 세제의 폐지

- 중국의 新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중국기업 33%, 외자기업 15~24%이던 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함.

표 1. 기업소득세제 변경의 개요

외자 우대 세제		과도적 조치					외자계 기업 · 중국 기업 동일한 우대 세제
	~07	08	09	10	11	12	
경제특구 등 특별구역 혹은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	15%	18%	20%	22%	24%	25%	· 농림수산업: 면제 혹은 반감
경제특구 등 특별 구역이 있는 도시의 구시가지의 생산형기업	24%	25%	25%	25%	25%	25%	· 하이테크 기업: 15%
2免3減 (이익 연도부터 1~2년째는 면제, 3~5년째는 반감)	이미 감면 중인 기업에는 계속 적용. 감면개시 안한 기업은 2008년부터 감면기간을 기산						· 중소기업: 20%
							· 공공 인프라 투자, 에너지 절약 · 환경보호 관련 사업: 3免3減(이익 연도로부터 1~3년째 면제, 4~6년째 반감)

자료: 三菱東京UFJ 銀行 經濟調査室(2009. 1. 15), 經濟レピュー, 「改革開放30周年における対中投資環境の變化」에서 재인용.

② 노동관련 규제 강화 및 노동비용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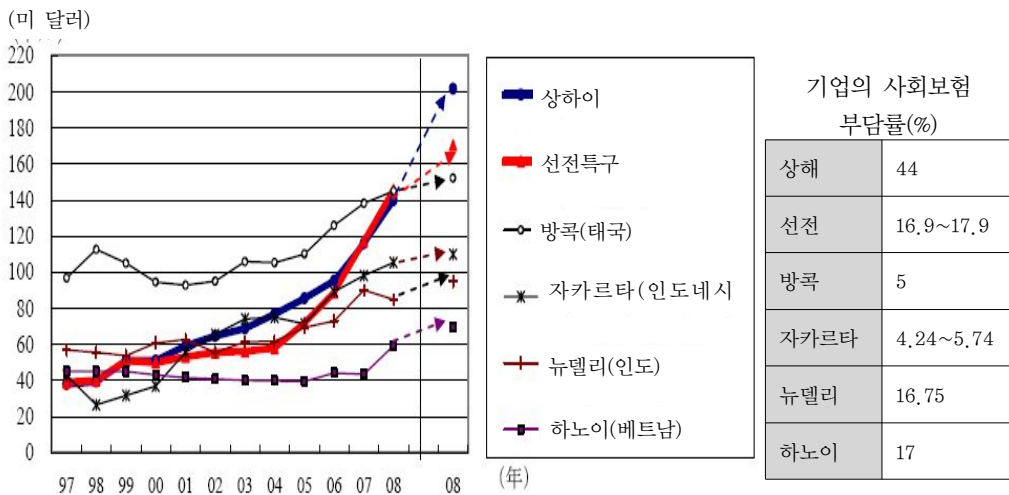
-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단기고용 관행, 임금체납, 무단해고, 사회보장제도 미비 등 열악한 중국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이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노동관련 법률/법규 등 입법이 강화되어 고용창출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중시하고 있음.
- 특히 종신고용을 촉진하는 「노동계약법」(2007년 6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취업촉진법」(2007년 8월)에 이어, 노동쟁의의 신속처리를 위한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을 제정 공포(2008년 5월 시행 예정)하여 3대 노동자보호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음.
- 노동계약법, 최저임금제의 강화된 적용, 공회 설립 권장 등 최근의 제도환경 변화는 기업에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켰음.

표 2. 기업의 노무관련 비용 부담 증가

항 목	노무관련 비용 상승 요인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압력
경제보상금	- 퇴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 - 기업은 8.3%의 노무비용 상승이 불가피 - 10년 이상 근속자가 많은 기업의 경우 경제보상(퇴직)충당금의 적립에 따른 대규모 자금 부담 발생
노조비용	- 노조(공회) 구성 의무화 - 기업은 노조경비로 총임금의 2%를 지급
사회보장 부담	- 5대 보험의 의무 가입 ※ 통상 중소기업들은 전직원의 25~50%만 가입 - 추가적인 사회보장비용 부담 : 40~50% 수준
장애인 고용	- 청도시의 경우 전체 종업원의 1.5%의 장애인 고용 - 장애인 미고용시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자료: KIEP(2008), 『중국 진출기업 비정상적 철수에 따른 통상마찰 최소화를 위한 노무관리 지원방안 연구』.

그림 3. 중국과 주변국가의 월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부담을 비교



주: 방콕은 일일 임금을 월 25일 노동으로 환산.

자료: 三菱東京UFJ 銀行 經濟調査室(2009. 1. 15), 經濟レピユ- 「改革開放30 周年における対中投資環境の变化」에서 재인용.

③ 반독점 및 M&A 규제 강화

-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중국시장 영향력 확대와 중국기업에 대한 M&A 시도에 대해 중국 내의 경제감이 확산됨에 따라 담합(카르텔) 금지, 독과점 행위, M&A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반독점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8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였음.

표 3. 반독점법의 주요 내용

규정	내용
반독점위원회 설치	- 국무원에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하여 반독점 업무 전반을 지도할 것을 명시
담합(카르텔)	-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자 합의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지위 남용	- 시장에서 행해지는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가격독점, 약탈적 가격설정, 차별적 대우, 단독거래 강요, 끼워팔기 등으로 규정
기업합병 ⁴⁾	- 반독점법에서 규정한 경영자 집중은 인수합병, 주식 및 자산 취득을 통한 통제권한 보유, 계약과 같은 방식을 통해 기타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한을 갖거나 기타 경영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행정권력을 남용한 경쟁배제 및 경쟁제한	- 행정기관 및 공공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강제거래, 지역간 자유로운 상품유통을 방해하는 행위, 해당 지역 입찰에 타 지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타 지역 경영자에 대한 불평등 대우, 경영자가 독점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정행위를 행정독점으로 규정

자료: KIEP(2008.2), 「중국 무역·외국인 투자정책 변화와 우리기업에의 영향 및 정책 시사점」.

④ 투자 선별화 정책 및 수출 억제책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은 1995년 6월 처음 발표되었고 이후 4차례 수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목록은 외국인투자 업종을 장려·제한·금지 등 3단계로 분류하고 있음.
- o 이는 중국정부의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기술혁신 분야의 외국인투자 역할 강화,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발전이 주요 목적임.
- 한편 중국은 무역흑자 확대에 의한 무역마찰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시 부가가치세(增值稅) 환급률 인하 및 가공무역에 대한 보증금 적립, 가공무역 금지목록 등을 발표함으로써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자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나. 최근 FDI 관련 정책 동향

- 최근 FDI의 지속적인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됨.
- 2009년 4월 15일 야오젠(姚賡) 상무부 대변인은 FDI 감소국면을 막기 위한 4가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4) 중국의 반독점법에서는 ‘경영자 집중’으로 표기되어 있음.

- 즉, △ 무역투자 원활화와 외자 심사권한의 하부기관 이전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중서부 지역 이전 장려 △ 경쟁력 있는 하이테크 산업의 적극 지원 △ 반독점 심사 강화 및 외자의 M&A 방식 국내기업 구조조정 참여 장려 등임.⁵⁾
-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와 노사문제에 관해서 각 지방정부들이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하고 있음.

① 외국인투자 창업분야 심사/관리권한 하급부서 이전

- 2009년 3월 「외상투자 심사비준업무 개선 관련 통지」를 발표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수입 설비 감독관리 사전 해제시 심사비준을 받도록 한 것을 철폐하고, 중국 내 지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⁶⁾
- 또한 외상투자목록의 장려류 업종 및 국가 조정이 불필요한 산업 분야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설립, 증자, 계약 변경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외자기업의 중국 국내기업 합병시 장려 및 허가류의 경우 1억 달러 이하, 제한류의 경우 5,000만 달러 이하이면 지방상무부처에서 심사하도록 함.
- 「외상 지주회사 투자설립 심사비준 권한 이관 통지」에서는 외국투자자가 등록자본금 1억 달러 이하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관련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상무부 심사비준 권한을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도시,⁷⁾ 부성급 도시로 이관하도록 함.
- 이러한 외국인투자 심사비준 권한 이양으로 외자유치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외자유치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이 기대됨.

② 중서부 지역 이전 장려를 위한 정책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2009년 1월 24일 「중서부 지역 외국인투자 우위 산업목록(2008년 수정)」을 공동 발표하여 외자의 중서부 이전을 적극 유도할 것이며, 외자의 농업 2차가공 분야 진출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⁸⁾
- 이 목록에는 중서부 21개 성, 직할시, 자치구의 411개 투자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목록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장려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우대정책의 대상이 됨.

5) 『中國證券報』(2009. 4. 16), 「中 1분기 외자 유치 20.6% 감소, 감소폭 줄어」.
 6) 주중국대사관 (2009. 3. 21), 중국 최근 FDI 현황 및 투자유치 정책 변화.
 7) 계획단열도시(計劃單列城市)는 중국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성급과 동일한 경제 관리권한을 갖는 지방 도시로는 현재 선전, 닝보, 칭다오, 다롄, 샤먼 등 5개가 있음.
 8) 『신화사』(2009. 1. 8), 「산업투자목록 新수정안 발표, 외자의 중서부 이전 적극 유도」.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이전은 동부개발구에는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중서부개발구에는 현지의 자원 우위를 발휘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되지만, 중서부 지역의 물류환경이 열악하고 산업 이전의 부대조치가 미흡한데다 행정 및 사업 비용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높은 등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 산업 이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⁹⁾

③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은 기술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기계전자제품, 방직품 및 의류, 노동집약형 제품 등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2008년과 2009년에 5차례에 걸쳐 인상하였음.

표 4.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현황

인상 품목	시행시기
방직품, 의류 품목	2008. 8. 1
3,486개 품목(방직품, 의류, 완구, 가구 등)	2008. 11. 1
3,770개 품목(노동집약형 제품)	2008. 12. 1
553개 품목(기계 전자제품)	2009. 1. 1
3,325개 방직품, 의류 품목	2009. 2. 1
3,082개 품목 (방직품, 전자정보 등)	2009. 4. 1

자료: KOTRA GLOBAL WINDOW.

④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대상 품목 목록 조정 및 은행보증금 제도 잠시 중단

-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2009년 2월 1일부터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대상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개정 시행하여, 제한대상 품목은 1,730개 품목을 삭제한 500개 품목으로, 금지대상 품목은 27개 품목을 삭제한 1,789개로 축소하였음.¹⁰⁾
- 한편 가공무역 기업을 살리기 위해 수출제한 품목 1,853개와 수입제한 품목 272개에 대해 은행보증금 예치 조치를 잠시 중단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도모함.¹¹⁾
-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금융위기로 인한 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적 수단으로, 고부가가치 산업과 친환경 및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변경된 것은 아님.

9) 『글로벌원도우』 (2009. 1. 7), 「中, 중서부 외국인투자 비교우위 산업 목록 수정판 발표」.

10) 『글로벌원도우』 (2009 1. 4), 「中, 가공무역 숨통 트인다」.

11) 『글로벌원도우』 (2008. 11. 29), 「中, 가공무역기업의 은행보증금제도 잠시 중단」.

⑤ 최저임금기준 조정 보류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08년 ‘통지’ 를 통해 기업의 최저임금 기준 조정을 잠정 보류하고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기초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조치는 기업의 원가 압력, 특히 중소기업의 원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
- 동 조치의 영향으로 2009년에 걸쳐 대략 1년간은 전국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¹²⁾

⑥ 외자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 2009년 1월 1일부터 외국자본이 투자한 부동산 임대수입 세율을 현행 18%에서 12%로 인하하도록 하였음. 대신 공평과세의 원칙에 의거해 이전에 외국기업이나 개인은 낼 필요가 없었던 도시건설비와 교육분담금을 내자 및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함.
- 동 조치는 외자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탈예방 및 중국내 신규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한 것임.¹³⁾

⑦ 기업의 정리해고 통제 및 규범화 대책 발표

- 2009년 1월 광둥성 정부는 新 「노동법가이드」를 발표하여 20인 이상 해고시 현지 노동보장부서와 협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고, 가급적 기업의 불필요한 감원을 줄이고 노동분쟁을 감소시켜 기업과 노동자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¹⁴⁾
- 2009년 1월 다롄(大連)시 정부는 20인 이상 정리해고시 사전 신고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고용단위의 정리해고 관리문제의 통제와 규범에 대한 통지(關於控制和規範用人單位裁減人員有關問題的通知)」를 발표하여 정리해고 통제를 법으로 규범화시킴.
- 감원 수가 20명 이상 혹은 20명 이하이지만 총 인원의 10% 이상일 경우, 정리해고 방침을 제정하여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¹⁵⁾
- 상하이(上海)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를 발표함.¹⁶⁾

12) 『星島環球網』(2008. 11. 18), 「中 중소기업 부담 덜기 위해 최저임금기준 조정 보류」.

13) 『아시아투데이』(2009. 1. 8), 「中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올인」.

14) 『글로벌원도우』, 「中 광둥성, 新<노동법가이드> 발표」.

15) 『글로벌원도우』(2009.1.14), 「中 다롄시, 20인 이상 정리해고 사전 신고제 실시」.

- 준비서류는 기업영업허가증과 공회법인자격증서 복사본, 노조대표 혹은 근로자 대표의 개인 자료, 기업이 작성한 서면의 근로자 해고방안, 기업이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의견을 경청했다는 자료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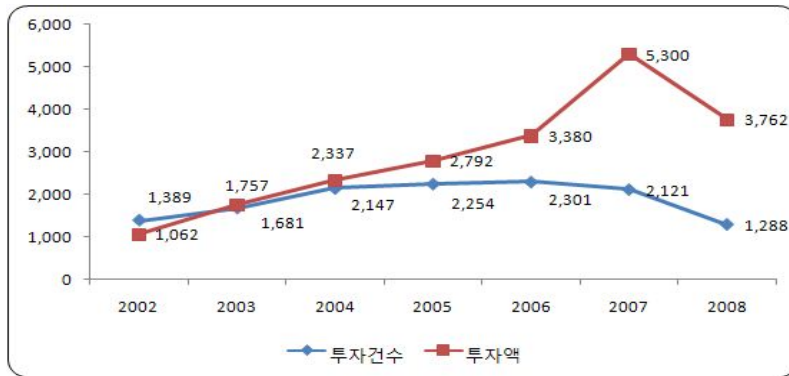
3. 한국의 대중국 FDI 현황 및 전망

■ 한국의 대중국 FDI 현황

- 2008년까지 누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건수는 37,816건, 금액은 265억 달러로 각각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의 43.0%, 22.8%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건수는 1,288건, 투자금액은 37억 6,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39.3%, -29.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2008년 들어 대중국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전반적인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와 위안화 환율 절상이 글로벌 경제위기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4.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한편 중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의 변화, 임금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중국 내 임가공을 목적으로 진출한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전체 투자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건당 투자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중소기업에 의한 대중국 투자건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후부터 2006년까지 개인 투자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는 중소기업과 개인기업 투자건수는 모두 감소함.

16) 『新聞晨報』(2009. 2. 1), 「上海: 企業裁員必須上報四項材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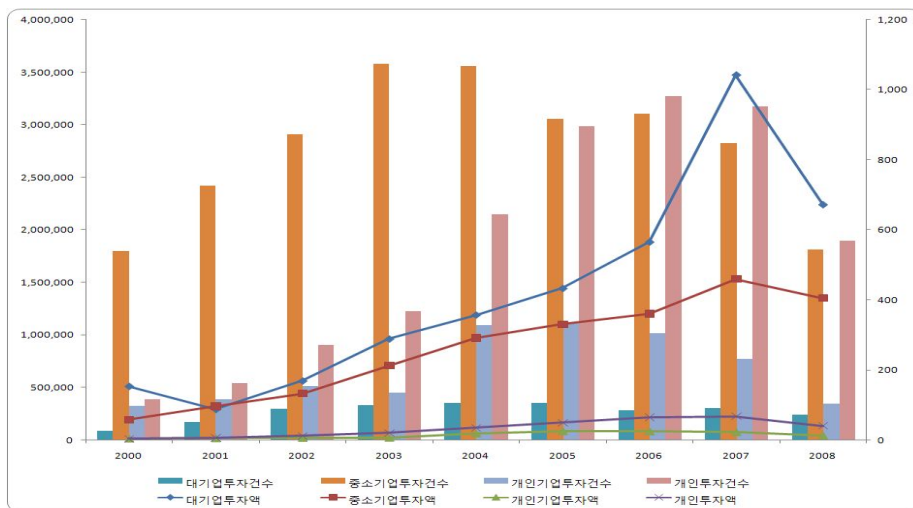
표 5. 대중국 투자의 투자자 규모별 분포(2008년)

주투자자 규모	신규법인 수		투자금액(억 달러)		건당투자액 (만 달러)
	법인수	구성	투자액	구성	
합계	19,355	100	264.6	100	137
대기업	1,093	5.6	152.4	57.6	1,394
중소기업	10,699	55.3	96.8	36.6	90
개인기업	2,267	11.7	4.9	1.9	22
개인	5,268	27.2	10.6	4.0	20
기타(비영리단체 등)	28	0.1	0.1	0.0	2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

- 최근 대중국 투자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대기업 투자와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 투자, 서비스 분야의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 대중국 투자자 규모별 투자금액과 투자건수



자료: 수출입은행통계.

- 향후 대중 신규투자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증가하고 자본력 및 기술력을 갖춘 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¹⁷⁾

4. 시사점

- 최근 중국의 FDI 관련 정책 동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급속한 외자의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17) 수은혜외경제(2009. 4), 「2008년 우리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과 시사점」.

- 그동안 중국이 추진해왔던 산업구조 재편성 정책과 이에 따른 외자 선별 유치 및 규제 강화라는 FDI 정책 방향이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 도산·실업자 증가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정책을 잠정 정지하거나 연기하는 조치들로 선회되었음.
- 즉, 외국인투자 심사절차의 간소화, 최저임금 인상의 동결,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 인상, 가공무역의 보증금 적립 잠정 정지 등 수출·생산 거점으로서의 경쟁력 저하를 억제하는 조치가 연달아 도입됨.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임금수준 인상을 지향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임.
-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대중 투자기업에 불리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저임금을 통해 극단적으로 염가의 제품을 공급해 온 기업이 도태됨으로써 과당경쟁의 완화나 소득증가에 수반하는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증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¹⁸⁾
- 따라서 중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 중 자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애로대책 수립 및 도태 기업들의 합법적인 철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경영 상태에 따라 정상단계 기업, 단기 경영악화 단계 기업, 퇴출단계의 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현재 중국 사업환경 변화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대만, 일본, 홍콩 등 각국의 중국 진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8) 三菱東京UFJ 銀行 經濟調査室(2009. 1. 15), 經濟レビュー, 「改革開放30周年における對中投資環境の變化」